

溫室經濟는 끝났다

尹 錫 雄

〈每日經濟新聞社 産業部長〉

우리나라 경제는 1979년을 전후해 새국면을 맞게 되었다. 정치적 여건 변동이 극심했을 뿐 아니라 때마침 몰아닥친 제 2차 원유값 폭등이 큰 충격을 주었던 시점이다.

해외 건설경기의 급냉과 각국의 보호장벽이 갑자기 높아져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한 것이다.

7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중화학공업은 산업조정을 해야할 상황이었고 기업들의 부채의존도가 크게 높아지는 등 難題가 가중되었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과거 정부 주도형의 성장 전략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가 이미 싹텄다. 경제 접근 방식을 다른 각도에서 구하려는 움직임이 정부 내에서 또 재계에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구체화돼 경제의 효율성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점차 「민간주도형 경제」란 말이 일반화 되기에 이르렀다.

돌이켜 보면 1962년부터 5개년 단위로 추진된 경제개발 정책은 성장이 지상과제였다. 모든 것은 富가 해결해 준다는 논리로써 다른 조건은 모두 성장에 부속됐던 것.

노동력외에 기술·자본·자연자원이 태반이 부족했던 만큼 능률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육실에 물이 가득차면 흘러넘친다」라는 명제가 내세워져 다른 여건은 돌아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이 시책은 행정력에 의해 추진될 수

밖에 없었고 대기업이나 특정산업 위주의 선별 정책이 요구되었다.

이 전략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70년대까지 國富의 상당한 축적이 가능했다.

반면 그 부작용도 못지 않게 커 현재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성적인플레·外債의 누증·기업체질 약화·富의 편재·금융의 왜곡현상이 심화되었다.

기업들은 1962~1979년까지 연평균 17%라는 높은 인플레이션에서 큰 투자수익을 즐겼다.

구태여 기술개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인플레이가 수익을 늘려 주었다. 外債외에 밀지는 해외 공사일지라도 외화를 들여 오면 금융수익이나 투자수익이 높아 단기적으로 위험부담없이 인플레이 수익이 상승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장기업의 부채의존도는 급격하게 높아져 이 무렵 450%에 이르렀다. 상대적으로 대외경쟁력은 저하되었다.

도시와 농촌, 근로자들의 격차가 확대되었고 금융은 자율성을 잃어 비효율성이 확산되었다.

자금은 효율성을 따라 흘러가게 마련이나 정부주도하의 금융은 경직성을 띠어 왜곡현상을 빚어내게 됐다.

산업구조는 크게 개선이 되지 못했다. 높은 수익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을 꾀하여야 했으나 중장기 계획을 세운 기업은 많지 못했다.

경쟁국인 대만이 대외경쟁력을 대폭 높여나갈

때 우리기업은 오히려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다.

후발 개발도상국의 추격은 맹렬해지고 있으나 체질이 약화된 기업들로선 경쟁력이 낮아 속수 무책이었다. 한때 정책의 불을 탄던 중화학공업 투자 역시 멀리 앞서는 선진국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와 같은 경제문제를 앞으로는 시각을 달리 해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 보자는 방안이 민간주도에 의한 경제방식이다.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효율과 능률을 꾀해 나가자는 전략인 것이다.

이미 민간부문이 1960년대 개발초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충돼 과거와 같이 일부 경제관료가 주축이 된 정부주도엔 한계가 노출된 것이다.

총선까지 특정산업을 지정, 중점 육성하던 방식은 산업구조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따라 써먹기가 어려워졌다. 살아 숨쉬는 경제에 대한 직접통제는 오히려 비능률이 따른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다.

인플레이를 잡고 외형성장을 떨쳐버려 실질안정 성장체제로 전환하자는 안정화시책이 채택된 것이다.

물가를 부추기는 요소는 가능한 한 제거되기 시작했다. 부동산투기억제책에서 보듯 강력하게 제1주의로 안정대책이 수립된 것이다.

인플레이심리추방운동, 소비절약, 부족자원의 수입개방 등 일련의 강력한 시책으로 고질적인 인플레이는 수습되었다. 때마침 국내의 경기후퇴로 원자재가 안정, 소비퇴조에 의한 영향도 작용했다.

기업들은 더이상 과거와 같은 인플레이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다음으로 추진된 정책이 금융의 자율화이다. 금융의 기능을 회복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취지이다.

지금까지 금융기관 자율성이 크게 퇴조한데서 비롯된 왜곡현상을 풀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1981년 韓一銀行을 필두로 5개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과감하게 추진되었다.

또 금리를 자율화시켜 돈의 편재현상을 해소하고 저축의욕을 높여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며 내자동원을 능률적으로 전개키로 한 것이다.

다음으로 수입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관세나 직접적인 수입규제로 막아오던 고식적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화 폭을 넓히자는 것이다. 우선 1986년까지 자유화율을 92%로 높이기로 했다.

외국상품의 수입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국내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경쟁을 붙인 것이다.

개발초 유치단계에선 보호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개방, 경쟁을 통해 체질을 개선시키자는 전략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아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필수조건이다.

아울러 88년까지 수입자유화율을 95.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스케줄이 짜여졌다. 보호보다는 경쟁을 택한다는 기조 전환이다.

수입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보호와 독과점운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율의 인하도 함께 시행하기로 한 것은 이시책들이 강도있게 추진된다는 것을 뜻한다.

평균관세율을 83년 22% 수준에서 84년에 20%, 88년엔 16.9%로 서서히 선진국 수준에 접근시켜 나갈 계획이다.

관세율의 인하는 물론 수입상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부과속에서 보호를 받아온 국내상품을 온실의 비닐을 제거,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는 일관된 취지이다.

이 개방시책은 우리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수출드라이브 정책, 외국의 높은 무역장벽과 공세에 의한 요소도 있다. 최근 미국의 무역공세에서 보듯 우리만 울타리를 높인 채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過保護에만 둘 수 없는 딱한 처지가 된 것이다. 실상 이제까지 여러 차례 경쟁력을 키울 기회가 있었어도 기업들이 온상에서 나오려들지를 않아 이제는 정부측에서 물리적으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문호도 한층

확대했다. 기업들에게 이들 조치가 고통을 가중시켜 달가울리 없지만 자주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외국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지 못한다면 종래엔 파국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뺨뺨기니 문어발식 확장이니 해서 논란을 빚어왔던 방만한 경영방식에도 메스가 가해졌다.

1980년의 9·27 조치는 기업체질 강화와 기업풍토를 쇄신한다는 전제 아래 기업과 기업인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차분, 재벌의 계열사 정리 등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시책이 강구되었다.

1천2백17개 기업을 대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신고를 받아 처분을 유도했다. 26개 재벌기업에 대해선 계열기업 정리를 명령했다.

이때 기업들이 신고한 비업무용부동산은 8천4백만평에 달했는데 이중 70%가 매각됐으며 계열기업은 1백8개社가 흡수 등으로 정리되었다.

재벌기업의 타법인 출자가 엄격하게 규제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또하나 특기할 만한 시책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다.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투를 철저히 막으려는 시책이

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이 시행돼 대기업들의 구분별한 투기, 하도급 부조리, 여신규제가 가해졌다.

대기업의 경쟁제한 행위 불공정거래 등이 모두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었다.

80년이래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키 위해 9·27 기업체질강화 대책외에도 주식회사 외부감사제 시행·독점규제·중소기업제열화지원책이 전개되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는 공인회계사에 의해 회계처리를 올바르게 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자본금 5억원이나 자산 30억원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한 외부감사제의 시행은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 기업결합을 제한한 것과 시장지배 사업자를 확정 발표한 것도 공정거래를 위한 배려이다.

외국인의 100% 투자허용 업종을 4백27개로 확정, 문호를 개방한 것이나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법의 제정은 대기업 일변도 시책에서 벗어나 균형있게 고른 성장을 추진하려는 시책이다.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않은 업체에 대해선 여신중단이란 강경한 조치가 취해져 불필요한 토지의 보유를 막고 재무구조를 개선케 했다.

不實企業의 지원도 막을 내렸다. 과감하게 정리토록 해 경영자의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아울러 타기업에 대한 출자를 규제, 무절제한 투자를 억제토록 했고 확장을 방지토록 했다.

주거래은행의 종합여신관리체제 강화도 같은 노선에서 이루어졌다.

덤핑수출·독과점 규제가 강조되었고 계열기업 상호출자도 규제돼 내실있는 경영을 촉진토록 했다.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강화에 이어 30대재벌여신규제강화는 불필요한 출자를 막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전문화를 추구토록 한 전략의 일환이다.

1984년엔 독과점품목의 수입자유화 확대조치가 취해져 온실안에서의 손쉬운 소득근원을 새



거했다. 기업들도 새 국면을 맞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이상 정부의 보호 울타리 안에서 생존해갈 수가 없게 되었다. 인플레이와 부채관리에 의한 손쉬운 경영시대는 지나갔다.

급변하는 변화에 적응능력이 있는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신축성이 없는 기업은 도태되어야 할 운명인 것이다. 부채가 과다하거나 위기관리능력이 소멸된 몇몇 대기업이 무너진 것은 안타깝지만 별수 없는 일이다.

혹독한 외부환경의 변화는 기업들에게 전환을 요구한다. 지금부터는 정상 경영과 기술개발이 요청된다. 갖가지 감량경영은 이제 채질화되어야 할 것이다.

부채에 의존한 경영에서 탈피,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발전과 혁신이 가능한 것이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자본·노동력·자원·기술의 4가지 경제요소 가운데 아무래도 기술개발이 우선순위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대외경쟁력을 높여 살아남기 위해선 기술개발이 선결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온실에서 벗어나 자립할 길은 기술개발 뿐이기 때문이다. 경쟁력 강화는 결국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로 귀결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거 기술개발투자를 게을리했다. 기술개발투자보다 수익률이 더 큰 투자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소홀했던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그 결과는 명료하게 드러났다. 일본의 기업들은 기술개발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황에 아랑곳 않고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다른 나라 업체와의 격차가 한층 벌어지는 상황이다.

미국의 IBM도 좋은 본보기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호경기가 지나고 침체기가 다가오자 유수의 기업들마저 휘청거린다. 신제품이라야 기껏 해외에서 개발한 기계를 본따 유사품 생산에 그친 것이 많다.

경공업제품의 기술투자도 공정개선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을 3가닥 꼬던 것을 5가닥으로 늘린단가 하는 방식이 많았다. 이제는 쉽게 돈 벌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는 경영자

가 많다. 제품가격에 이윤을 붙여 파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소비자가 주는 가격에서 이윤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급변한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불과 4~5년 사이에 일어났다. 기업들은 미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충격을 받은 사례도 많을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 끊임없이 지속되리라는 데 있다.

기업들도 이제는 스스로 대응전략을 찾고 있다. 경영체질을 개선하고 방만한 경영에서 벗어나 합리화를 꾀하는 몸부림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높아만 가는 무역장벽을 뚫으려는 시도가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내면적으로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 재무구조도 많이 개선시켰다.

감량경영이란 뼈아픈 고통을 참아내고 제열 기업 정리를 하고 있는 기업도 많다. 품질향상을 위한 전 사원의 피나는 노력도 경주되고 있다. 종업원의 정신무장강화, 연수를 통한 자질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이 팽배해지는 상황이기도 하다.

혹독한 불황을 겪으면서 이미 많은 기업들은 체질을 개선했다. 과거의 확장일변도의 경영방식이 지양되고 전문기업화의 움직임이 질게 일고 있다. 더이상 부채에 의한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자율적으로 적응해나가는 노력이 엿보이는 것이다.

좋은 예가 첨단산업에의 큰 관심이다. 첨단산업 참여는 하나의 분수령이다. 기술개발투자가 선행되는 만큼 종전과는 다른 효율적이면서도 전문경영이 요청되는 분야이다. 유전공학, 첨단소재, 반도체 산업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래 기업환경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 모험이 따르는 기술개발투자에 나서는 것이다.

기업은 국민경제의 기둥을 이루는 만큼 올바른 좌표설정과 발전전략이 한층 강조된다.

앞으로 경영자는 자율로 발전책을 세워 추진해나갈 입장인 반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하는 새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